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237

2014년 2월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논문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 요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준 영

2014년 2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방안

정 준 영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요인

Public Support for Reunification of Korea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준 영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요인

지도교수 지 병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준 영

정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창 헌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기 광 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지 병 근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목차 ····· i
표 목차 ····· iii
ABSTRACT ····· v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합리적 선택 모델 ····· 6
제2절 사회학적 모델 ····· 7
제3절 민족정체성 모델 ····· 8
제4절 이데올로기 모델 ····· 11

제3장 연구디자인 ····· 12
제1절 주요가설 ····· 12
제2절 데이터 및 변수 ····· 15

제4장 기초통계 ····· 19
제1절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인 ····· 20
제2절 인구학적 특성과 통일에 대한 지지 ····· 36

제5장 통일에 대한 지지 결정요인 분석 ····· 41
제1절 이원분석 ····· 41
제2절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 ····· 45

제6장 결론 ····· 51

참고문헌 ····· 53
부록 ····· 55

<표 목차>

<표 1> 연구분석틀 ····· 4
<표 2>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 15
<표 3> 통일의 필요성과 시기 ····· 19
<표 4-1> 성별과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0
<표 4-2> 지역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1
<표 4-3> 연령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2
<표 4-4> 가계 월 소득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3
<표 4-5> 학력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4
<표 5-1> 성별과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5
<표 5-2> 지역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5
<표 5-3> 연령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 26
<표 5-4> 가계 월 소득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7
<표 5-5> 학력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 28
<표 6-1> 성별과 민족 정체성 ····· 28
<표 6-2> 지역별 민족 정체성 ····· 29
<표 6-3> 연령에 따른 민족 정체성 ····· 30
<표 6-4> 가계 월 소득에 따른 민족 정체성 ····· 31
<표 6-5> 학력과 민족 정체성 ····· 32
<표 7-1>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 ····· 33
<표 7-2> 지역에 따른 정치적 성향 ····· 33
<표 7-3> 연령에 따른 정치적 성향 ····· 34
<표 7-4>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정치적 성향 ····· 35
<표 7-5> 학력에 따른 정치적 성향 ····· 35
<표 8-1> 성별과 통일 지지 ····· 37
<표 8-2> 연령과 통일 지지 ····· 37
<표 8-3> 전라도과 영남, 경남 지역의 통일에 대한 지지 비교 ····· 38
<표 8-4>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지지 ····· 39
<표 8-5> 학력에 따른 통일에 대한 지지 ····· 40
<표 9> 국가적 이익과 통일에 대한 지지 ····· 42
<표 10> 개인적 이익과 통일에 대한 지지 ····· 43
<표 11> 민족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지지 ····· 44
<표 12> 정치적 성향과 통일에 대한 지지 ····· 45

<표 13> 통일에 대한 지지결정 요인 ····· 46
<표 14>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관계 ····· 50

ABSTRACT

Public Support for Reunification of Korea

Jun-Young Jeong
Advisor : Byong-Kuen Jhee
Major in General Societ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why Koreans suppor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t analyzes the 'Unification Attitude Survey 2010' survey dataset cull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show that national interests or individual interests, progressiv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national identity promote public support for reunification. It suggests that educational prescription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issued based on our understanding of such determinants that facilitate public pro-reunification attitudes.

Key words: National interests, Individual interests, National identity, Political ideology unificatio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1950년 이후 한반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남북분단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분단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은 이중성을 보여 왔다.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란 갈등과 대결,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는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두 가지의 성격이 공존하는 가운데 관계가 지속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특징적인 것은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 세계적으로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만이 분단국으로 남아 여전히 이중성을 발휘하고 있는 구조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남북관계가 형성된 이후 모든 시기에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두 국가의 협력적인 부분은 개성공단 사업추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의 경제적 협력, 장관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개최 등의 정치적 협력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의 문화적 협력 측면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 통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한반도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과 공리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 그러나 최근 통일에 대한 반대의식과 무관심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국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미래 통일한국 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연령층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의사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으로 비추어 볼 때 정부의 협력적인 관계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1)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통일문제 이해 2013," 『통일문제 이해』, no.3 (2013. 8), p.11.

있다.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연구한 학술연구는 분단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사되어 오고 있다. 주로 통일정책관련 연구소, 통일연구소, 언론기관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통일의 방법론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과거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민의 통일의식에 초점을 둔 학술연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통일의식에 관한 학술연구들은 주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여론조사를 할 때 나이, 성별, 지역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는 한계점을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민족의 결합과 관련지어 통일에 대한 지지를 당위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들이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일 지지요인 자체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수준 또는 북한에 관한 관심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변화하는지 그 실질적인 원인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은 당위적으로 당위성이 경제적인 가치 추구 등 개인의 이상적 가치를 다룬 통일에 대한 지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가정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3] 아울러 인구학적인 측면을 이용하여 통계를 측정하고 있지만, 통일은 민족 전체의 문제로 전체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뿐 개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난다.[4]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들이 왜 통일을 지지하는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합리적인 선택, 집단에 의한 선택, 민족 정체성에 의한 선택, 이념에 의한 선택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통일지지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본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통일 지지를 결정할 때, 자신 또는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

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김태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통일연구논총』no. 4 (1995. 7). pp.130-132.
4) 이종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통일교육총서』no. 11 (2005. 1). p.20.

크다.

둘째, 집단에 의한 선택은 개인은 사회와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집단이 어떤 목표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회집단의 개인들은 그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자기 생각과는 다를 때도 영향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이념에 의한 지지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 또는 보수적으로 나누어졌을 때, 어떠한 사회문제 해결에 직면했을 때도 합리적 선택보다는 이념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념적 선택의 관점에서 통일 지지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이 통일을 더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평등을 가치의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불평등하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 정체성에 의한 지지 결정이다. 민족 정체성에 의해 통일 지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통일 지지를 선택하면서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 민족 정체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일 수 있다. 즉,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지요인과 인구학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지지 결정요인을 밝히는 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지지는 이익, 정치적 이념, 민족 정체성과 같은 요인들을 중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2010 통일의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IPUS)의 국민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5)]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회적 요인들을 기초로 주요 가설에 대한 설명 및 이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변수의 설정과 함께 그 분석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지지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통일에 지지 결정요인들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발

5) 2010통일의식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홈페이지(www.tongil.snu.ac.kr)에서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다.

견된 사실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논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통일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국가 단체와 개개인이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교육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지지요인을 밝힘으로써 올바른 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2절 연구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IPUS)에서 지난 2010년 조사한 통일의식조사자료를 기초로 통일과 통합에 관한 문헌조사 및 분석을 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 수준의 조사이다. 한 지역에 국한된 통일에 관한 조사가 아닌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사로 대상을 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사회조사 중에서도 대표성 있는 전국적 표본을 추출하여 통일 지지에 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통일의식조사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될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 틀을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러한 연구 분석 틀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회귀분석을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

<표 1> 연구 분석틀

독립변수	
이익	국가적 통일이익
	개인적 통일이익
정체성	민족 정체성
이념	진보적/보수적
집단	사회 집단

→

종속변수
통일에 대한 인식

위의 분석틀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익', '정체성', '이념', '집단'의 네 가지 요인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각 요인의 분석에서 '국가적 이익', '개인적 이익', '민족 정체성', '정치적 성향', '사회집단'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이익에서는 통일 후 얻게 될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통일 지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통일 후 얻게 될 이익의 단위와 이와 관련된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한다. 둘째로 정체성에서는 '민족 정체성'에 주목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다. 민족 정체성이 민족성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로 보고 민족 정체성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한다. '민족 정체성'을 통일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아울러 '정치적 성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에서도 사회 집단적 요인 또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 선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활동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는 사회집단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사회집단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할 때의 방법을 분석해 본다. 예를 들어 사회집단은 지역 또는 연령에 의한 집합적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현재의 분단된 상태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것은 단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남한과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다.[6] 통일과 관련한 여론의 인식은 양극화가 심한 주제인 만큼 통일에 대한 여론의 분포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은 국제정치 연구에서 주로 논의

6)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통일문제 이해 2012,"『통일문제 이해』, no.2 (2012. 3), pp.9-10.

되어 왔다. 대외정책과 여론의 관계에 있어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여론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내왔다. 그에 반해 자유주의적 시각은 여론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다.

제1절 합리적 선택 모델

합리적 선택의 방법은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행동한다는 것이다.[7] 합리적 선택이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기준 아래 무엇을 할지 결정(선택)하기 전에 그 행동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8] 사람들은 협조라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즉,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함으로써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규범이나 의무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에 따르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협조함으로 인해서 통일 후에 얻게 되는 이익이 보장된다면 규범에 따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설명한 피오리나(Morris P. Fiorina)는 "개인이 어떠한 결정을 선택할 때 먼저 계산을 한다"고 주장하였다.[9] 즉, 개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지금까지 나타난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시각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의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아울러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선택을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두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합리적 선택의 조건들을 이용하여 이 선택의 조건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들은 경제적 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들이 동의라는 행동을 통해 교환을 다룬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익을 얻기 전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합리성의 개념이 도구적인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10]

---

7) 구현우, “합리적 선택이론의 새로운 지평,”『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 no.4 (2009. 2), p.190.
8) 은종태,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정치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1), p.21.
9) 엄기홍 외,『투표행태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2009), pp.111-113.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안 중 개인 또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에 가장 근접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지지는 개인의 이기심을 토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합리적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 행위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본 통일은 개인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지지를 선택하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익의 평가를 하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통일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지지가 결정될 때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는 '이익'이라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국가와 개인의 이익 수준에서 통일 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을 때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은 통일 한국에서의 순이익이 적게 나타난다고 판단이 들면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기대심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11)]

그리고 통일이익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경제적 이익의 보장보다는 군사적 이익이 통일을 통해 증가한다면 통일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익 등의 '이익'이라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은 국가적 또는 개인적 이익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익의 극대화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통일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선택'은 민족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사회적 실제를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다는 분석적인 문제도 있다는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즉, 합리적인 국민들은 통일 한국에서의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통해 통일 지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2절 사회학적 모델

사회학적 접근법[12)]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

10) 정준표,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11, no.2 (2004.3), pp.422-424.
11) 최수영, "통일의 순이익 확대와 남북경협," 『정보화 정책』, 4, no.4 (1997.8), p.16.
12) 컬럼비아대학의 라자스펠트에 의해 194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대중매체나 선거운동과 유권

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이 인종, 계층, 성별, 직업, 종교, 지역, 정당 등의 어떠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같은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면서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은 같은 선호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이 선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선택의 결정에 있어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13]

이처럼 사회학적 관점은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소속된 집단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 또는 교사, 친구 등과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4] 사회적 관점에서 선택을 말한 Blau는 문화나 인종의 차이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비하여,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계층은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1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통일을 지지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 알 수도 있다. 집단이란 문화적, 정치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단체이다. 하나의 사회적 단체는 예를 들어 문화, 언어, 종교, 역사, 전통 등에 대한 선호 방향에 따라 함께 묶일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 집단은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공동체를 확립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의 형태로 표현되지만, 또한 시민의식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16]

제3절 민족 정체성 모델

우리 민족은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 아래서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특히 '공동체 의식'을 지닌 우리민족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주변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해왔다. 세계화가 확산하면서 개별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

자의 선호도 형성에 관한 연구로 시작된 접근법이다.

13) 은종태,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1), p.19

14) 임용수, 『진로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교육 문제』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2), pp.89-92.

15) Duane Brow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ed.* Monica Kirkpatrick Johnson (John Wiley & Sons, 2002), p.45.

16) 앤드류 헤이우드,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 정치학』, 조현수 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482.

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 중 언어집단과 국민이 일치하는 단일 국가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가치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통일 지지에 대한 결정요인 그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수준 또는 북한에 관한 인식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통일의식에 관한 학술연구들은 주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들은 대체로 나이, 성별, 지역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수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17]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인 가치 추구 등과 같은 개인의 이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8] 과거에는 민족의 결합과 관련지어 통일에 대한 지지를 당위적으로 여겼고 현재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인구학적인 측면을 이용하여 통계를 측정하고 있지만, 통일이라는 민족 전체의 문제에 대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인식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난다.[19]

언급된 바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국가의 중대사안에서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처리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까운 시일에 남북한의 통일이 추진되더라도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힘든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지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즉, 정부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전체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자들은 통일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에 저항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북한 사람과의 만남을 결정하고 의도치 않은 만남의 상황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국민의 과반수로는 통일될 수 있지

17)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2010통일의식조사』등이 있다.
18) 성승제, “통일 당위성과 통일편익의 법적기반 조성을 위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한양법학』, 43, no.39 (2012. 8), pp.130-132.
19) 이종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통일교육총서』no. 11 (2005. 1). pp.104-108.

만, 국민의 과반수만으로는 통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인종·언어·문화에 있어서 상당한 동질성을 지녀왔다. 우리 민족은 통일국가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 왔으며 우리 민족의 공통된 언어구조와 전통문화는 높은 유사성과 일체감을 부여하고 있다.[20]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민족의식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의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은 민족동질성 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반도의 국민들은 통일을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애국적 충성심과 민족의식이 일반적으로 함께 나눈 과거에 대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식은 민족주의를 역사가 인정한 가치와 제도를 방어하면서 전통주의의 한 형태로 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때 집단 구성원과 연결되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반영하여 지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적 이론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 할 때 남한 내부에 소속된 사회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에 함께 구성되어있다는 민족주의로 인하여 통일을 지지 할 수도 있다. 이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민족 정체성이 통일의 결과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21]

즉, 민족 정체성에 의하여 통일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 통일을 지지하느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아울러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주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EU통합에 관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에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

---

20)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통일문제 이해 2013,"『통일문제 이해』, no.3 (2013. 8), pp.71-72.

21) Hopkins, N. and S. Reicher,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tegories ad Processes of Social Change: Arguing about National Identities*, ed. G. Greakwell (Oxford: Butterworth-Heinemann, 1996). pp.53-63.

히려 유럽통합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22]

그러나 가설과 반대되는 입장도 존재한다. 민족정체성이 강하면 사람들은 자국에 대해 정치적인 충성심이 강화 된다는 이유로 통일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과 같이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23]

제4절 이데올로기 모델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구분하는 방법은 좌파와 우파로 분류하는 것이다. 좌파는 진보, 사회주의로 간주하며 사회개혁 또는 전체 규모의 경제적 변화의 형태를 지향할 수 있다. 특히 좌파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우파는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연속성을 지지할 수 있다.[24]

보통 우파를 지지하는 계층은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중산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파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자본주의는 자유를 구현하는 이념으로서 개인의 욕구충족을 최대한 허용하는 자율과 합리 및 능률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자율과 합리 및 능률이라는 가치체계로 개인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타인을 자신보다 먼저 고려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게 된다.

반면, 좌파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는 평등을 구현하는 이념으로서 이타적이고 협동적이며 인도적인 부분도 강조한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구현은 기본적으로 타인지향적인 가치로서, 개인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5]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통일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수탈이 평등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 특히, 진보적

---

22) 이우영,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수훈 편 (서울 선인, 2012), pp.12-13.

23) Carey, S. *Undivided loyalties: is national identity an obstacle to European integration,* vol.3 (Oxford: European Union Politics, 2002), pp.387-413.

24) 앤드류 헤이우드,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 정치학』, 조현수 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485.

25) 위의 글. pp.485-486.

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들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파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통일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통일일 수 있다. 즉, 우파는 국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북한인민의 자유권 보장과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세력의 존재는 경제발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이데올로기가 통일을 더 지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보가 더 통일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반면에 진보는 최우선 목표가 평등의 실현이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수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제3장 연구디자인

제1절 주요가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한국인들의 요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여러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조사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변수와 민족주의, 한국인이 지녀야 할 자긍심 등에 관련된 변수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의 적용방법을 기초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은 국제체제와 분단 당사자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설정한다. 분단국의 통일은 분단 당사국가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단국의 통일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변국의 양해와 협조를 얻는 국제적 요인과 분단 당사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대내적 요인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분단국의 통일에는 국제적 요인과 분단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두 요소에 의해 통일 여부가 결정된다.

가설 1. 남한 주민들은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통일에 대해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가설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국가적(집단적)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인이 통일을 지지하는 데 영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제해결에 있어 '이익'이라는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개인들은 통일의 지지를 결정하는데 국가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될 경우에만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후 이익이 발생해야 통일을 지지하리라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는 가설이다.

가설2. 남한주민들은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민족 정체성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 통일에 대한 지지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들보다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각자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되면서 지역통합 후 정체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다원성을 인정하여 민족 정체성이 다른 주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설3. 남한주민들은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이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지지했으며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해소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이유로 개혁 지향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은 이념적 위치가 진보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형태는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보수적인 지향성을 가지 집단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우월하다는 가치관 아래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형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는 통일방식을 주장한다. 이들은 보수적 성격의 방식이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에 맞춰져 있는 만큼 북한의 해방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을 기조로 통일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역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수 세력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가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보수 세력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존이익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세력은 과거부터 끊임없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통일을 더 지지할 수 있다는 경우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가설4. 호남지역의 거주자일 경우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과 비교하면 영남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치적 이념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며 통일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설은 통일 또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설5.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설은 전형적인 인구학적 요소에 기초한 주장으로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이 통일에 대해 지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지지가 저연령층이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단 이후 현재의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된 연령층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국가가 북한보다 미국이라고 느끼는 저연령층은 민족주의 성향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제2절 데이터 및 변수

1. 데이터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통일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IPUS)의 '2010 통일의식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여론조사는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시기, 통일 후 국가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 민족 정체성,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가치요소들과 관련된 응답자들의 평가를 묻는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부록참조). 이 질문들은 각각 앞서 언급했던 주요 가설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인구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었으며 통계프로그램(SPSS)이 이용된 조사 된 자료이다.[26]

이 연구는 여론조사를 통한 연구형태로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국민들의 주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때문에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인구학적 구분을 통해 유의미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여론조사의 인원은 전국 16개시와 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8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분포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27] 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전체	백분율
성별	남	603	50.3
	여	597	49.8
연령대	19～29 세	303	25.3
	30 대	312	26.0
	40 대	305	25.4
	50대 이상	280	23.3

26)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p.231.
27) 위의 글. p.14.

응답자 학력	중졸 이하	104	8.7
	고 졸	462	38.5
	대재 이상	634	52.8
혼인상태	미혼	372	31.0
	기혼	807	67.3
	이혼/별거	15	1.3
	사별	6	0.5
거주지역	수 도 권	590	49.17
	중 부 권	118	9.83
	호 남 권	119	9.92
	영 남 권	324	27
	강 원	36	3
	제 주	13	1.08
직업	농/수/축산업	32	2.7
	자 영 업	260	21.7
	블루 칼라	233	19.4
	화이트칼라	239	19.9
	전업 주부	247	20.6
	학생/무직/기타	189	15.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2	16.9
	200～299만원	315	26.3
	300～399만원	332	27.7
	400만원 이상	348	29.1
정치적 성향	진보	398	33.2
	중도	541	45.1
	보수	261	21.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나. 변수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는 '통일에 대한 지지'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기서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이기에 회귀 계수의 추정을 위해 서열로지스틱회귀분석(Cordered logistic estimation method)이 이용되었다. 독립변수는 통일 후 얻게 될 국가이익 또는 개인 이익에 대한 기대수준, 한국인이 지녀야 할 자긍심을 민족정체성의 수준, 진보/보수의 정치성향을 이념적 요인으로 나누어 포함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가계소득, 학력 등이 통제변수에 포함되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일에 대한 지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전혀 필요 없다=1, 별로 필요 없다=2, 반반/그저 그렇다=3 약간 필요=4 매우 필요=5)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적인 부분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통일이 언제쯤 가능" 하는지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가능년도 문항에 대한 답변(10년 이내=1, 30년 이내=2, 30년 이상=3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국민들의 통일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개인적 이익, 정치적 이념, 민족 정체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첫 번째로, 통일 후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사용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기서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전혀 이익 안 됨=1, 별로 이익 안됨=2, 다소 이익이 됨=3, 이익이 됨=4)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 통일 후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사용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전혀 이익 안 됨=1, 별로 이익 안됨=2, 다소 이익이 됨=3, 이익이 됨=4)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일에 대한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념성향'이 사용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의 답변(매우 보수적=1, 약간 보수적=2, 중도=3, 약간 진보적=4, 매우 진보적=4)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사용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

기서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전혀 자랑스럽지 않다=0,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2, 다소 자랑스럽다=3, 매우 자랑스럽다=4)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를 측정하였고 이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과 신뢰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서열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통일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모델에는 독립변수로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이익과 함께 정치적 이념, 민족 정체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선호지수를 사용하였다. 각 모델은 서열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라는 모두 같은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모델에는 통제변수로 성별(남성=1, 여성=0), 연령(19~29세 이하=1, 30~39세 이하=2, 40~49세 이하=3, 50~59세 이하=4, 60세~=5), 소득(200만 원 미만=1,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3, 400만 원 이상=4), 교육수준(중졸 이하=1, 고졸=2, 대재 이상=3)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가설들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후 국가적 또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민족 정체성의 수준, 진보적 정치성향과 같은 요인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국가적 또는 개인적 통일이익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 보수적 정치성향이거나 민족 정체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변수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령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고령층의 경우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은 높을수록 민주주의를 향유 할 기회가 많고 정보수집과 기회가 크기 때문에 지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정치체제를 고민할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제4장 기초통계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통일 평화연구소의 2010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일 지지를 결정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민족정체성에 입각한 지지인지 또는 통일에 성공한 국가들의 선례들로 인한 기대감 생성 때문인지 모른다. 이에 그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개인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요인들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28)]

아래의 <표 3>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의 2010 통일의식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전 국민의 약 59%만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나타냈고 약 41%의 국민들이 무관심을 포함한 지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통일이 '5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3.4%)과 '10년 이내'로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17.8%)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통일이 '20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24.1%)은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30년 이내'로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13.4%)은 낮게 나타났다. 가장 주목해 볼 항목은 통일의 시기를 '30년 이상'으로 보는 응답률(20.8%)과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20.6%)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3> 통일의 필요성과 시기

주요가치 및 요소	세부요소	전체	지지도
1.통일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48	4.0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9	16.6
	반반/그저 그렇다	245	20.4
	약간 필요 하다	381	31.8
	매우 필요 하다	327	27.3
	전체	1200	100.0
2. 통일의 시기 전망	5년 이내 가능	41	3.4

10년 이내 가능	213	17.8
20년 이내 가능	289	24.1
30년 이내 가능	161	13.4
30년 이상 가능	249	20.8
불가능하다	247	20.6
전체	1,200	100.0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제1절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인

1.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아래의 <표 4-1>은 성별에 따라 통일을 한다면 국가에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남성이 60% 정도, 이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남성들이 30%를 전후로 고르게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통일을 하면 국가에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여성은 39%,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여성들이 50%를 전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국가적 이익'이라는 측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통일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익의 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1> 성별과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성별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이 됨(C)	매우 이익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남성	9.4 (56)	44.6 (266)	36.5 (218)	9.6 (57)	39.1 (236)	60.9 (367)	$X^2(3)$ =36.94
여성	7.6	31.5	41.3	19.6	53.9	46.1	Pr

	(46)	(190)	(249)	(118)	(322)	(275)	
전체	8.5	38.0	38.9	14.6	46.5	53.5	=0.000
	(102)	(456)	(467)	(175)	(558)	(642)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지역별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 유형은 근소한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 4-2>와 같이 호남, 충청, 수도권, 제주 지역에서는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어 60%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영남(41.7%)과 강원(36.1%) 지역에서는 비교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원지역의 경우는 북한과 인접하여 위협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형성된 평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적인 특성은 통일 후 국가적 이익이라는 측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2> 지역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지역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이 됨(C)	매우 이익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호남	7.6	32.8	42.9	16.8	40.3	59.7	
	(9)	(39)	(51)	(20)	(48)	(71)	
영남	11.4	46.9	33.3	8.3	58.3	41.7	
	(37)	(152)	(108)	(27)	(189)	(135)	
충청	5.9	38.1	33.1	22.9	44.1	55.9	
	(7)	45	(39)	(27)	(52)	(66)	$X^2(15)$
수도권	7.0	33.7	43.6	15.8	40.7	59.3	=53.54
	(41)	199	(257)	(93)	(240)	(350)	Pr
강원	19.4	44.4	27.8	8.3	63.9	36.1	=0.000
	(7)	(16)	(10)	(3)	(23)	(13)	
제주	7.7	38.5	15.4	38.5	46.2	53.9	
	(1)	(5)	(2)	(5)	(6)	(7)	
전체	8.5	38.0	38.9	14.6	46.5	53.5	
	(102)	(456)	(467)	(175)	(558)	(642)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아래 <표 4-3>은 각 연령별로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을 하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은 전 연령에서 40~50%를,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40~50%를 전후로 고르게 비율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49세의 연령대에 비해 50~60대의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30~40대에 비해 19~29세의 연령층에서 통일이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른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표 4-3> 연령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연령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19~29 세 이하	7.9 (24)	40.6 (123)	37.6 (114)	13.9 (42)	48.5 (147)	51.5 (156)	
30~39 세 이하	6.7 (21)	36.5 (114)	37.8 (118)	18.9 (59)	43.3 (135)	56.7 (177)	
40~49 세 이하	8.2 (25)	33.8 (103)	43.0 (131)	15.1 (46)	42.0 (128)	58.0 (177)	$X^2(12)$ =28.37
50~59 세 이하	7.7 (15)	43.8 (85)	38.1 (74)	10.3 (20)	51.6 (100)	48.5 (94)	Pr =0.005
60~68 세 이하	19.8 (17)	36.1 (31)	34.9 (30)	9.3 (8)	55.8 (48)	44.2 (38)	
전체	8.5 (102)	38.0 (456)	38.9 (467)	14.6 (175)	46.5 (558)	53.5 (642)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다음으로 아래의 표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는 가계 월 소득별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전 소득층에 걸쳐 살펴보면 통일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49~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39~52%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은 남북한의 통일보다 생계유지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4-4> 가계 월 소득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소득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200만원 미만	11.9 (24)	38.6 (78)	29.7 (60)	19.8 (40)	50.5 (102)	49.5 (100)	
200~ 299만원	11.1 (35)	41.3 (130)	36.5 (115)	11.1 (35)	52.4 (165)	47.6 (150)	$X^2(9)$ =28.69 Pr =0.001
300~ 399만원	7.5 (25)	38.0 (126)	39.8 (132)	14.8 (49)	45.5 (151)	54.5 (181)	
400만원 이상	4.9 (17)	34.8 (121)	46.0 (160)	14.4 (50)	39.7 (138)	60.3 (210)	
전체	8.4 (101)	38.0 (455)	39.0 (467)	14.5 (174)	46.5 (556)	53.6 (641)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적 이익은 학력에 따라 그 차이를 보여주었다. 고졸이상 그리고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여주는 고학력자는 50~58%가 통일 후 국가적 이익이 높을 것 이라고 보았다. 그와 반대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는 34% 만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이 표에서 봤을 때 학력이 낮을수록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학력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

교육 수준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중졸 이하	18.3 (19)	47.1 (49)	29.8 (31)	4.8 (5)	65.4 (68)	34.6 (36)	
고졸	10.0 (46)	39.6 (183)	37.7 (174)	12.8 (59)	49.6 (229)	50.4 (233)	$X^2(6)$ =36.83
대재 이상	5.8 (37)	35.3 (224)	41.3 (262)	17.5 (111)	41.2 (261)	58.8 (373)	Pr =0.000
전체	5.5 (102)	38.0 (456)	38.9 (467)	14.6 (175)	46.5 (558)	53.5 (642)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이처럼 인구학적 변수 모두 통일 후 국가적 이익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국가적 이익이 많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변수에서는 호남이 국가적 이익이 많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남은 호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국가적 이익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와 학력의 경우 여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나타냈는데 이 역시 저연령층의 경우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고학력자의 경우에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연령층이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입의 경우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수치고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입은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표 5-1>은 통일 후 발생하게 될 개인적 이익에 대해 성별에 따른 평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라 통일을 하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

는 남성이 30% 정도, 이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남성들이 69%를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통일을 하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는 여성은 18%, 이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여성들은 81%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의 경우 개인적 이익의 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는 여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1> 성별과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성별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남성	17.4 (105)	51.7 (312)	25.5 (154)	5.3 (32)	69.2 (417)	30.9 (186)	$X^2(3)$ =28.01 Pr =0.000
여성	23.0 (137)	58.5 (349)	16.8 (100)	1.8 (11)	81.4 (486)	18.6 (111)	
전체	20.2 (242)	55.1 (661)	21.2 (254)	3.6 (43)	75.3 (903)	24.8 (297)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그리고 <표 5-2>에서는 통일 후에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전 지역에 걸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15~34% 정도를 전후로 나타났으며, 이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65~84%를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봤을 때, 전 지역적으로 통일 후 개인적 이익이라는 측면에 대해 낮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남과 제주 지역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영남의 보수적인 성향과 제주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5-2> 지역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지역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호남	16.0 (19)	49.6 (59)	30.3 (36)	4.2 (5)	65.6 (78)	34.5 (41)	$X^2(15)$ =31.16

영남	25.3 (82)	56.8 (184)	15.1 (49)	2.8 (9)	82.1 (266)	17.9 (58)	
충청	17.8 (21)	50.9 (60)	24.6 (29)	6.8 (8)	68.6 (439)	31.4 (37)	
수도권	17.8 (105)	56.6 (334)	22.2 (131)	3.4 (20)	74.4 (439)	25.6 (151)	Pr =0.008
강원	36.1 (13)	41.7 (15)	19.4 (7)	2.8 (1)	77.8 (28)	22.2 (8)	
제주	15.4 (2)	69.2 (9)	15.4 (2)	0.0 (0)	84.6 (11)	15.4 (2)	
전체	20.2 (242)	55.1 (661)	21.2 (254)	3.6 (43)	75.3 (903)	24.8 (297)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각 연령별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아래 <표 5-3>에서 볼 수 있다. 전 연령에 걸쳐 통일을 하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19~29% 정도로 많지 않았으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70~80%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 후 발생하게 될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연령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19~29 세 이하	21.8 (66)	53.1 (161)	21.8 (66)	3.3 (10)	74.9 (227)	25.1 (76)	
30~39 세 이하	20.5 (64)	55.5 (173)	19.6 (61)	4.5 (14)	76.0 (237)	24.0 (75)	$X^2(12)$ =10.23 Pr =0.596
40~49 세 이하	19.0 (58)	51.8 (158)	25.3 (77)	3.9 (12)	70.8 (216)	29.2 (89)	
50~59 세 이하	18.6 (36)	62.4 (121)	16.5 (32)	2.6 (5)	80.9 (157)	19.1 (37)	

60~68세 이하	20.9 (18)	55.8 (48)	20.9 (18)	2.3 (2)	76.7 (66)	23.3 (20)	
전체	20.2 (242)	55.1 (661)	21.2 (254)	3.6 (43)	75.3 (903)	24.8 (297)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다음 <표5-4>에서는 가계 월 소득별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통일을 하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20%,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70% 전후로 전 소득층에 걸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5-4> 가계 월 소득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소득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200만원 미만	25.7 (52)	49.0 (99)	18.3 (37)	6.9 (14)	74.8 (151)	25.3 (51)	
200~299만원	23.2 (73)	54.3 (171)	20.0 (63)	2.5 (8)	77.5 (244)	22.5 (71)	$X^2(9)$ =26.95
300~399만원	20.2 (67)	58.4 (194)	19.6 (65)	1.8 (6)	78.6 (261)	21.4 (71)	Pr =0.001
400만원 이상	14.4 (50)	56.3 (196)	25.0 (87)	4.3 (15)	70.7 (246)	29.3 (102)	
전체	20.2 (242)	55.1 (661)	21.2 (254)	3.6 (43)	75.4 (902)	24.6 (295)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학력과 개인적 이익의 사이는 차이는 <표 5-5>에서 볼 수 있는데 저학력층의 경우 통일 후 개인적 이익이 높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8.3%, 이익이 된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층도 21~28%만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았고, 약 70~80%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 표에서 봤을 때 학력에 관계없이 통일 후에는 개인적 이익에 대

한 기대감이 확연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와의 수치도 사실상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학력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

학력	전혀 이익 안 됨(A)	별로 이익 안 됨(B)	다소 이익 이 됨(C)	매우 이익 이 됨(D)	이익 안됨 (A+B)	이익 임 (C+D)	X^2
중졸 이하	26.0 (27)	55.8 (58)	16.4 (17)	1.9 (2)	81.7 (85)	18.3 (19)	
고졸	23.2 (107)	55.2 (255)	19.1 (88)	2.6 (12)	78.4 (362)	21.7 (100)	$X^2(6)$ =14.43
대재 이상	17.0 (108)	54.9 (348)	23.5 (149)	4.6 (29)	71.9 (456)	28.1 (178)	Pr =0.025
전체	20.2 (242)	55.1 (661)	21.2 (254)	3.6 (43)	75.3 (903)	24.8 (297)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이처럼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연령, 학력을 제외한 성별, 지역, 가계별 월 소득은 통일 후 개인적 이익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개인적 이익이 많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변수에서는 호남이 개인적 이익이 많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남은 호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정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의 경우와 학력의 차이 역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였다. 수입의 경우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수치고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입은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민족정체성에 대한 평가

<표 6-1> 성별과 민족 정체성

성별	전혀 자랑 안 됨(A)	별로 자랑 안 됨(B)	다소 자랑 스러움(C)	매우 자랑 스러움(D)	자랑 안됨 (A+B)	자랑 스러움 (C+D)	X^2
남성	1.8	14.4	56.6	27.2	16.3	83.8	$X^2(3)$
	(11)	(87)	(341)	(164)	(98)	(505)	=5.48
여성	0.5	16.1	58.0	25.5	16.6	83.4	Pr
	(3)	(96)	(346)	(152)	(99)	(498)	=0.140
전체	1.2	15.3	57.3	26.3	16.4	83.6	
	(14)	(183)	(687)	(316)	(197)	(1003)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위의 <표 6-1>과 같이 성별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수준은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성별이 민족 정체성의 수준이 높은 남성의 경우가 약 80%, 민족 정체성의 수준이 높은 여성도 약 80%를 정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이 표에서 봤을 때 성별의 차이는 '민족 정체성' 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별의 차이와 관계없이 민족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6-2> 지역별 민족 정체성

지역	전혀 자랑 안 됨(A)	별로 자랑 안 됨(B)	다소 자랑 스러움(C)	매우 자랑 스러움(D)	자랑 안됨 (A+B)	자랑 스러움 (C+D)	X^2
호남	0.8	8.4	55.5	35.3	9.2	90.8	
	(1)	(10)	(66)	(42)	(11)	(108)	
영남	1.5	13.9	63.9	20.7	15.4	84.6	
	(5)	(45)	(207)	(67)	(50)	(274)	
충청	1.7	12.7	57.6	28.0	14.4	85.6	$X^2(15)$
	(2)	(15)	(68)	(33)	(17)	(101)	=28.73
수도권	1.0	17.0	54.1	28.0	18.0	82.0	Pr
	(6)	(100)	(319)	(165)	(106)	(484)	=0.017
강원	0.0	30.6	58.3	11.1	30.6	69.4	
	(0)	(11)	(21)	(4)	(11)	(25)	
제주	0.0	15.4	46.2	38.5	15.4	84.6	
	(0)	(2)	(6)	(5)	(2)	(11)	

전체	1.2 (14)	15.3 (183)	57.3 (687)	26.3 (316)	16.4 (197)	83.6 (1003)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다음으로 위의 <표 6-2>를 보면 지역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차이를 알 수가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가장 높은 90% 정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영남, 충청, 수도권, 제주 지역은 80%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원지역의 민족 정체성 수치이다. 전 지역에 걸쳐 민족 정체성은 고루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강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낮은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었다.

북한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응답률이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표에서 봤을 때, 전 지역적으로 민족 정체성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지역 차이에 따라 민족 정체성이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의 <표 6-3>은 각 연령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차이이다. 20대에서는 약 79%, 30대에서는 약 81%, 40대에서는 약 86%, 50대에서는 약 85%, 60대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89%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연령의 민족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민족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불과 10~20%를 전후로 나타났음을 보아 연령은 '민족 정체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민족정체성이 낮아지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사실이다.

<표 6-3> 연령에 따른 민족 정체성

연령	전혀 자랑 안 됨(A)	별로 자랑 안 됨(B)	다소 자랑 스러움(C)	매우 자랑 스러움(D)	자랑 안됨 (A+B)	자랑 스러움 (C+D)	X^2
19~29 세 이하	1.0 (3)	19.1 (58)	55.8 (169)	24.1 (73)	20.1 (61)	79.9 (242)	
30~39 세 이하	1.3 (4)	17.3 (54)	57.4 (179)	24.0 (75)	18.6 (58)	81.4 (254)	
40~49 세 이하	1.6 (5)	11.5 (35)	58.0 (177)	28.9 (88)	13.1 (40)	86.9 (265)	$X^2(12)$ =12.79 Pr =0.385
50~59 세 이하	1.0 (2)	13.9 (27)	57.2 (111)	27.8 (54)	15.0 (29)	85.1 (165)	
60~68 세 이하	0.0 (0)	10.5 (9)	59.3 (51)	30.2 (26)	10.5 (9)	89.5 (77)	

전체	1.2 (14)	15.3 (183)	57.3 (687)	26.3 (316)	16.4 (197)	83.6 (1003)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가계 월 소득별 민족 정체성의 수준의 차이는 아래 <표 18>에서 볼 수 있다. 전 소득층에 걸쳐 한민족임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80% 정도를 전후 하고 있다. 한민족임이 자랑스럽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16% 전후로 그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민족 정체성이 높게 형성된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표 6-4> 가계 월 소득에 따른 민족 정체성

소득	전혀 자랑 안됨(A)	별로 자랑 안됨(B)	다소 자랑 스러움(C)	매우 자랑 스러움(D)	자랑 안됨 (A+B)	자랑 스러움 (C+D)	X^2
200만원 미만	2.0 (4)	11.4 (23)	49.5 (100)	37.1 (75)	13.4 (27)	86.6 (175)	
200~299만원	1.3 (4)	15.6 (49)	63.8 (201)	19.4 (61)	16.8 (53)	83.2 (262)	$X^2(9)$
300~399만원	0.6 (2)	15.4 (51)	56.3 (187)	27.7 (92)	16.0 (53)	84.0 (279)	=24.76 Pr
400만원 이상	1.2 (4)	17.2 (60)	56.6 (197)	25.0 (87)	18.4 (64)	81.6 (284)	=0.003
전체	1.2 (14)	15.3 (183)	57.3 (687)	26.3 (316)	16.4 (197)	83.5 (1000)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아래 <표6-5>는 학력에 따른 민족 정체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은 86%정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은 84%정도, 마지막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은 2%정도를 전후하고 있다. 이 표에서 봤을 때 학력은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와의 수치도 사실상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의 민족정체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있다.

<표 6-5> 학력과 민족 정체성

학력	전혀 자랑 안됨(A)	별로 자랑 안됨(B)	다소 자랑 스러움(C)	매우 자랑 스러움(D)	자랑 안됨 (A+B)	자랑 스러움 (C+D)	X^2
중졸 이하	1.0	12.5	53.9	32.7	13.5	86.5	
	(1)	(13)	(56)	(34)	(14)	(90)	
고졸	1.5	13.9	57.4	27.3	15.4	84.6	$X^2(6)$
	(7)	(64)	(265)	(126)	(71)	(391)	=5.49
대재 이상	1.0	16.7	57.7	24.6	17.7	82.3	Pr
	(6)	(106)	(366)	(156)	(112)	(522)	=0.482
전체	1.2	15.3	57.3	26.3	16.4	83.6	
	(14)	(183)	(687)	(316)	(197)	(1003)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이처럼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가계별 월 소득만이 민족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높을수록 민족 정체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입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맹목적인 민족정체성의 형성이 보다 저소득층에 비해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별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 역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상관없이 민족 정체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수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민족주의 교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 역시 민족 정체성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

성별에 따른 통일 후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아래의 <표 7-1>에서 볼 수 있다. 남성들 가운데 진보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36%,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20%를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여성들 가운데 진보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23%,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25%를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중도적인 성향으로 보는 남성들은 47% 정도, 여성들은 42%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없다.

<표 7-1>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

성별	매우 진보(A)	약간 진보(B)	중도	약간 보수(C)	매우 보수(D)	진보 (A+B)	보수 (C+D)	X^2
남성	4.0 (24)	32.8 (198)	42.8 (258)	17.9 (108)	2.5 (15)	36.8 (222)	20.4 (258)	$X^2(4)$ =11.71 Pr =0.020
여성	1.5 (9)	28.0 (167)	47.4 (283)	20.8 (124)	2.4 (14)	29.5 (176)	23.1 (138)	
전체	2.8 (33)	30.4 (365)	45.1 (541)	19.3 (232)	2.4 (29)	33.2 (398)	21.8 (261)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다음으로 지역별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아래의 <표7-2>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표에서는 호남지역이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영남, 충청, 수도권, 제주 등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호남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7-2> 지역에 따른 정치적 성향

지역	매우 진보(A)	약간 진보(B)	중도	약간 보수(C)	매우 보수(D)	진보 (A+B)	보수 (C+D)	X^2
호남	2.5 (3)	33.6 (40)	46.2 (55)	17.7 (21)	0.0 (0)	36.1 (43)	17.7 (21)	
영남	2.8 (9)	27.5 (89)	44.1 (143)	23.5 (76)	2.2 (7)	30.3 (98)	25.6 (83)	
충청	2.5 (3)	33.9 (40)	49.2 (58)	11.9 (14)	2.5 (3)	36.4 (43)	14.4 (17)	$X^2(20)$ =42.51 Pr =0.002
수도권	2.4 (14)	32.0 (189)	43.4 (256)	19.2 (113)	3.1 (18)	34.4 (203)	22.2 (131)	
강원	2.8 (1)	13.9 (5)	66.7 (24)	13.9 (5)	2.8 (1)	16.7 (6)	16.7 (6)	
제주	23.1	15.4	38.5	23.1	0.0	38.5	23.1	

	(3)	(2)	(5)	(3)	(0)	(5)	(3)	
전체	2.8 (33)	30.4 (365)	45.1 (541)	19.3 (232)	2.4 (29)	33.2 (398)	21.8 (261)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그리고 <표7-3>에서는 연령별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60~68세 이하는 23%가 진보, 33%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층은 전 연령층이 43~49%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표에서 봤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며, 고연령층 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높았다. 이것은 연령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표 7-3> 연령에 따른 정치적 성향

연령	매우 진보(A)	약간 진보(B)	중도	약간 보수(C)	매우 보수(D)	진보 (A+B)	보수 (C+D)	X^2
19~29 세 이하	3.3 (10)	37.0 (112)	44.6 (135)	13.2 (40)	2.0 (6)	40.3 (122)	15.2 (46)	
30~39 세 이하	2.9 (9)	31.4 (98)	49.4 (154)	13.8 (43)	2.6 (8)	34.3 (107)	16.4 (51)	
40~49 세 이하	3.3 (10)	30.2 (92)	43.6 (133)	21.3 (65)	1.6 (5)	33.4 (102)	23.0 (70)	$X^2(16)$ =48.31
50~59 세 이하	1.0 (2)	23.2 (45)	42.3 (82)	30.9 (60)	2.6 (5)	24.2 (47)	33.5 (65)	Pr =0.000
60~68 세 이하	2.3 (2)	20.9 (18)	43.0 (37)	27.9 (24)	5.8 (5)	23.3 (20)	33.7 (29)	
전체	2.8 (33)	30.4 (365)	45.1 (541)	19.3 (232)	2.4 (29)	33.2 (398)	21.8 (261)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가계 월 소득과 정치적 성향차이는 아래의 <표 7-4> 여기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30% 정도를 전후 하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20%를

전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은 약 40~50%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 연령별 정치적의 형성은 유의미 한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19세 이상 ~ 2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40%가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보수적 성향은 15%정도이다. 30~39세 이하는 34%가 진보, 16%가 보수적 성향이고, 40~49세 이하는 진보가 33%, 보수가 23% 정도이다. 50~59세 이하의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24% 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33%정도이다.

<표 7-4>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정치적 성향

소득	매우 진보(A)	약간 진보(B)	중도	약간 보수(C)	매우 보수(D)	진보 (A+B)	보수 (C+D)	X^2
200만 원 미만	3.5 (7)	26.7 (54)	43.6 (88)	24.3 (49)	2.0 (4)	30.2 (61)	26.2 (53)	$X^2(12)$ =15.07 Pr =0.238
200~ 299만	3.5 (11)	27.6 (87)	48.3 (152)	17.5 (55)	3.2 (10)	31.1 (98)	20.6 (65)	
300~ 399만	3.0 (10)	32.5 (108)	46.4 (154)	16.0 (53)	2.1 (7)	35.5 (118)	18.1 (60)	
400만 이상	1.4 (5)	33.1 (115)	41.7 (145)	21.6 (75)	2.3 (8)	34.5 (120)	23.9 (83)	
전체	2.8 (33)	30.4 (364)	45.0 (539)	19.4 (232)	2.4 (29)	33.2 (397)	21.8 (261)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아래의 <표 7-5>는 학력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17~39% 정도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17~37%를 전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은 약 40~50%를 전후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표 7-5> 학력에 따른 정치적 성향

학력	매우 진보(A)	약간 진보(B)	중도	약간 보수(C)	매우 보수(D)	진보 (A+B)	보수 (C+D)	X^2

중졸 이하	2.9 (3)	14.4 (15)	45.2 (47)	31.7 (33)	5.8 (6)	17.3 (18)	37.5 (39)	
고졸	2.0 (9)	26.0 (120)	47.6 (220)	22.1 (102)	2.4 (11)	27.9 (129)	24.5 (113)	$X^2(8)=$ 42.83
대재 이상	3.3 (21)	36.3 (230)	43.2 (274)	15.3 (97)	1.9 (12)	39.6 (251)	17.2 (109)	Pr= 0.000
전체	2.8 (33)	30.4 (365)	45.1 (541)	19.3 (232)	2.4 (29)	33.2 (398)	21.8 (261)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이처럼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가계별 월소득을 제외한 성별, 지역, 연령, 학력은 정치적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성별의 특성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변수에서는 호남이 진보적인 성향이 가장 높았고 영남이 호남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진보적인 성향이 대체로 두드러지지만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정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젊은 연령일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력의 차이 역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가 저학력자의 경우에 비해 정치적 성향이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구학적 요소들이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절 인구학적 특성과 통일에 대한 지지

아래<표 8-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약 65%가 통일에 대해 지지하고 17%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약 52%가 통일을 지지하며 24%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위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과반수이상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무관심과 반대에 대한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다.

<표 8-1> 성별과 통일 지지

성별	전혀 필요 없음(A)	별로 필요 없음(B)	반반	약간 필요 (C)	매우 필요 (D)	필요 없다 (A+B)	필요 (C+D)	X^2
남성	3.8 (23)	13.3 (80)	17.4 (105)	33.3 (201)	32.2 (194)	17.1 (103)	65.5 (395)	$X^2(4)$ =25.23 Pr =0.000
여성	4.2 (25)	19.9 (119)	23.5 (140)	30.2 (180)	22.3 (133)	24.1 (144)	52.4 (313)	
전체	4.0 (48)	16.6 (199)	20.4 (245)	31.8 (381)	27.3 (327)	20.6 (247)	59.0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아래의 <표 8-2>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지지도 변화를 살펴보자면 20대는 약 48%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고 30대는 55%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40대는 약 65%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약 34%가 통일에 대한 무관심 및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약67%가 지지, 약20%가 무관심 및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통일지지도 변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표 8-2> 연령과 통일 지지

연령	전혀 필요 없음(A)	별로 필요 없음(B)	반반	약간 필요 (C)	매우 필요 (D)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19~29 세 이하	5.6 (17)	21.8 (66)	23.8 (72)	32.0 (97)	16.8 (51)	27.4 (83)	48.8 (148)	$X^2(16)$ =49.87 Pr =0.000
30~39 세 이하	2.9 (9)	17.0 (53)	24.7 (77)	30.5 (95)	25.0 (78)	19.9 (62)	55.5 (173)	
40~49 세 이하	4.6 (14)	13.1 (40)	17.1 (52)	32.1 (98)	33.1 (101)	17.7 (54)	65.3 (199)	
50~59	3.6	16.5	15.5	33.5	30.9	20.1	64.4	

세 이하	(7)	(32)	(30)	(65)	(60)	(39)	(125)
60~68	1.2	9.3	16.3	30.2	43.0	10.5	73.3
세 이하	(1)	(8)	(14)	(26)	(37)	(9)	(63)
전체	4.0	16.6	20.4	31.8	27.3	20.6	59.0
	(48)	(199)	(245)	(381)	(327)	(247)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위의 <표 8-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응답자의 비율은 고연령층(60~68세)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약 73%가 지지를 나타낸 반면 응답자의 약 10% 정도만이 통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19~29세)의 통일에 대한 지지 수준 역시 의외로 낮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지지를 약 48%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약 23%가 중도적인 입장을 약 27%가 통일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장 높은 고연령층을 제외한 5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무엇보다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우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연령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남북 양국의 대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 지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역적 성향은 <표 8-3>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63.9%)과 호남(66.4%)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영남(50.0%), 강원(47.2%), 제주(46.2%)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8-3> 전라도과 영남, 경남 지역의 통일에 대한 지지 비교

지역	전혀 필요 없음(A)	별로 필요 없음(B)	반반	약간 필요 (C)	매우 필요 (D)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호남	1.7	6.7	25.2	23.5	42.9	8.4	66.4	$X^2(20)$ =74.66 Pr =0.000
	(2)	(8)	(30)	(28)	(51)	(10)	(79)	
영남	5.3	22.5	22.2	34.6	15.4	27.8	50.0	
	(17)	(73)	(72)	(112)	(50)	(90)	(162)	
충청	5.1	14.4	23.7	30.5	26.3	19.5	56.8	

	(6)	(17)	(28)	(36)	(31)	(23)	(67)	
수도권	3.2	14.8	18.1	32.7	31.2	18.0	63.9	
	19	(87)	(107)	(193)	(284)	(106)	(377)	
강원	8.3	36.1	8.3	25.0	22.2	44.4	47.2	
	(3)	(13)	(3)	(9)	(8)	(16)	(17)	
제주	7.7	7.7	38.5	23.1	23.1	15.4	46.2	
	(1)	(1)	(5)	(3)	(3)	(2)	(6)	
전체	4.0	16.6	20.4	31.8	27.3	20.6	59.0	
	(48)	(199)	(245)	(381)	(327)	(247)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위의 <표 8-3>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지역적으로 상이한 성향에 따라 통일 지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지역에 따라 통일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남과 비교하여 영남은 통일을 선호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통일과 관련된 의견에 지역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통일지지도를 아래 <표-8-4>와 같이 분석했다.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계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약 57%가 통일을 지지하고 약 21%가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을 가진 응답자는 약52%가 통일을 지지하였고 약 24%가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을 가진 응답자는 약 58%가 통일을 지지하였고 약 22%가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400만원 이상의 월평균 가계 소득 수준을 보이는 응답자는 약 66%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하였고 약 14%만이 통일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비해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서 통일에 대해 더욱 지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4>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지지

소득수준	전혀 필요 없음(A)	별로 필요 없음(B)	반반	약간 필요 (C)	매우 필요 (D)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200	3.5	18.3	20.3	26.2	31.7	21.8	57.9	$X^2(12)$

만원 미만	(7)	(37)	(41)	(53)	(64)	(44)	(117)	
200~ 299만원	5.1 (16)	19.7 (62)	23.2 (73)	31.1 (98)	21.0 (66)	24.8 (78)	52.1 (164)	
300~ 399만원	4.2 (14)	18.1 (60)	19.6 (65)	29.2 (97)	28.9 (96)	22.3 (74)	58.1 (193)	=25.36 Pr =0.013
400만원 이상	3.2 (11)	11.5 (40)	18.7 (65)	38.2 (133)	28.5 (99)	14.7 (51)	66.7 (232)	
전체	4.0 (48)	16.6 (199)	20.4 (244)	31.8 (381)	27.2 (325)	20.6 (247)	59.0 (706)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아래 나온 <표 8-5>를 보면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국민들 중 약 67%가 통일을 지지한다. 그리고 고졸이상, 대학교 재학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국민들 또한 약 56~59%가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했을 때 저학력자들이 고학력자들에 비해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5> 학력에 따른 통일에 대한 지지

교육 수준	전혀 필요 없음(A)	별로 필요 없음(B)	반반	약간 필요 (C)	매우 필요 (D)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중졸 이하	1.9 (2)	15.4 (16)	15.4 (16)	28.9 (30)	38.5 (40)	17.3 (18)	67.3 (70)	
고졸	5.0 (23)	17.3 (80)	21.0 (97)	32.7 (151)	24.0 (111)	22.3 (103)	56.7 (262)	$X^2(8)$ =11.18
대재 이상	3.6 (23)	16.3 (103)	20.8 (132)	31.6 (200)	27.8 (176)	19.9 (126)	59.3 (376)	Pr =0.192
전체	4.0 (48)	16.6 (199)	20.4 (245)	31.8 (381)	27.3 (327)	20.6 (247)	59.0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이처럼 인구학적인 변수들 가운데 성별, 연령, 지역, 가계별 월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통일에 대한 지지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이 남성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은 호남지역이 영남지역에 통일에 지지에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의 차이 역시 통일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쟁 등을 경험했던 고연령층이 통일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다른 연령층에 높을 수 있으며, 분단의 시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는 반통일적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차이 역시 통일의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자들은 수입이 안정되어 다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통일 지지에 대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생계유지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에 통일지지가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 통일에 대한 지지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이원분석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래의 <표 9>에 나와 있다. 응답자들은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약 53.5%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약 46.5% 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은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이 남한사회에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우'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약 14.6 %,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응답률은 약 8.5 %로 나타났다.

<표 9>국가적 이익과 통일에 대한 지지

국가적 이익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반반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전혀 이익 안됨	19.6 (20)	29.4 (30)	17.7 (18)	20.6 (21)	12.8 (13)	49.0 (50)	33.3 (34)	
별로이익 안됨	4.2 (19)	25.0 (114)	25.7 (117)	30.0 (137)	15.1 (69)	29.2 (133)	45.2 (206)	
다소 이익	1.3 (6)	9.6 (45)	18.6 (87)	40.5 (189)	30.0 (140)	10.9 (51)	70.5 (329)	$X^2(12)$ =267.06 Pr =0.000
매우 이익	1.7 (3)	5.7 (10)	13.1 (23)	19.4 (34)	60.0 (105)	7.4 (13)	79.4 (139)	
전체	4.0 (48)	16.6 (199)	20.4 (245)	31.8 (381)	27.3 (327)	20.6 (247)	59.0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재한 지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는 개인적 이익에 따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0>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개인적 이익에 따라 통일 지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 후 개인적인 기대감을 통일 자체보다 상위의 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분단의 지속으로 인하여 민족성이 감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

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 24.8%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약 75.2 %로 나타나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0>개인적 이익과 통일에 대한 지지

개인적 이익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반반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전혀 이익 안됨	12.4 (30)	26.5 (64)	26.5 64)	21.1 (51)	13.6 (33)	38.8 (94)	34.7 (84)	
별로 이익 안 됨	2.1 (14)	18.8 (124)	22.5 (149)	33.7 (223)	22.8 (151)	20.9 (138)	56.6 (374)	$X^2(12)$ =219.59 Pr =0.000
다소 이익	1.6 (6)	3.9 (10)	11.0 (28)	39.8 (101)	43.7 (111)	5.5 (14)	83.5 (212)	
매우 이익	0.0 (0)	2.3 (1)	9.3 (4)	14.0 (6)	74.4 (32)	2.3 (1)	88.4 (38)	
전체	4.0 (48)	16.6 (199)	20.4 (245)	31.8 (381)	27.3 (327)	20.6 (247)	59.0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앞서 제시된 통계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통일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교육 속에서 생성된 동일민족이라는 의식보다는 통일에서의 이익을 따지는 합리적인 측면이 강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는 통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을 개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통일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현재 매우 중요한 의미로 보인다. 왜냐하면 점차 통일을 합리적인 측면에

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후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사이에 기대감의 격차가 작게 나타난다면 사회의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의 <표 11>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민족 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민족 정체성이 통일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를 선호한다. 이는 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보다 민족주의를 상위의 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 정체성에 의한 통일 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족 정체성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약83~88% 정도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었지만 민족 정체성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는 약 34~56% 정도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표 11> 민족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지지

민족 정체성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반반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전혀 자랑안 됨	28.6 (4)	0.0 (0)	28.6 (4)	7.1 (1)	35.7 (5)	28.6 (4)	42.9 (6)	
별로 자랑 안 됨	4.4 (8)	23.0 (42)	24.0 (44)	30.1 (55)	18.6 (34)	27.3 (50)	48.6 (89)	
다소 자랑	3.5 (24)	15.6 (107)	21.5 (148)	35.7 (245)	23.7 (163)	19.1 (131)	59.4 (408)	$X^2(12)$ =71.16 Pr =0.000
매우 자랑	3.8 (12)	15.8 (50)	15.5 (49)	25.3 (80)	39.6 (125)	19.6 (62)	64.9(205)	
전체	4.0 (48)	16.6 (199)	20.4 (245)	31.8 (381)	27.3 (327)	20.6 (247)	59.0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아울러, 통일에 대한 지지가 정치적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타난 결과가 아래의 <표 12>이다. 아래의 <표 12>는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이념적으로 상이한 성향의 집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 선호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이념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적일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응답자들이 진보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지만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진보성을 띄는 응답자에 비해 통일에 대한 지지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약 44~88%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약 34~56%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나타나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치성향은 통일지지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정치적 성향과 통일에 대한 지지

정치적 성향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반반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없음 (A+B)	필요 (C+D)	X^2
매우 보수	9.1 (3)	26.5 (64)	26.5 64)	21.1 (51)	13.6 (33)	35.6 (7)	34.7 (25)	
약간 보수	3.0 (11)	18.8 (124)	22.5 (149)	33.7 (223)	22.8 (151)	21.8 (62)	56.5 (243)	$X^2(16)$ =56.11 Pr =0.000
중도	4.1 (22)	3.9 (10)	11.0 (28)	39.8 (101)	43.7 (111)	8.0 (111)	83.5 (297)	
약간 진보	3.5 (8)	2.3 (1)	9.3 (4)	14.0 (6)	74.4 (32)	5.8 (56)	88.4 (130)	
매우	13.8 (4)	24.1 (7)	17.2 (5)	6.9 (2)	37.9 (11)	37.9	44.8	

진보						(11)	(13)
전체	4.0 (48)	16.6 (199)	20.4 (245)	31.8 (381)	27.3 (327)	20.6 (247)	59.0 (708)

자료출처 : '2010 통일의식조사'

제2절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다. 통일 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일상적 삶의 평가와 양식의 변화에 대한 기대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통일을 당위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설정한다면 통일에 대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은 단지 시민의 참여가 통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거나 통일 이후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통일이 갖는 본연의 의미를 확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3>은 2010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지지요인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를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분석에서는 통일에 대한 지지수준을 종속변수로 놓았기 때문에 서열 로지스틱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표 13> 통일에 대한 지지결정 요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국가적 이익	0.989*** (0.12)	1.274*** (0.11)		
개인적 이익	0.877*** (0.14)		1.335*** (0.13)	
민족 정체성	0.479*** (0.14)			0.432*** (0.14)

이념	0.375***	0.476***	0.370***	0.469***
	(0.12)	(0.12)	(0.12)	(0.11)
호남	0.423**	0.503***	0.437**	0.465**
	(0.19)	(0.19)	(0.19)	(0.19)
영남	-0.410***	-0.407***	-0.472***	-0.578***
	(0.12)	(0.12)	(0.12)	(0.12)
남성	0.281***	0.337***	0.374***	0.493***
	(0.11)	(0.11)	(0.11)	(0.11)
고연령	0.519***	0.506***	0.520***	0.427***
	(0.15)	(0.15)	(0.15)	(0.15)
소득	0.274**	0.251**	0.309***	0.308***
	(0.11)	(0.11)	(0.11)	(0.11)
교육수준	0.640***	0.673***	0.496**	0.474**
	(0.23)	(0.23)	(0.23)	(0.23)
cut1	-1.862***	-2.218***	-2.534***	-2.354***
	(0.22)	(0.18)	(0.18)	(0.21)
cut2	0.0836	-0.281**	-0.636***	-0.483***
	(0.18)	(0.14)	(0.13)	(0.17)
cut3	1.227***	0.838***	0.455***	0.561***
	(0.18)	(0.14)	(0.13)	(0.17)
cut4	2.848***	2.401***	2.012***	2.014***
	(0.20)	(0.15)	(0.14)	(0.18)
사례수	1,197	1,197	1,197	1,197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델1에서는 국가의 이익, 개인이익, 민족 정체성, 정치적 성향 등의 통일지지에 있어 주요 가치 요소들과 인구학적 요소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도 있었다.

위의 <표 13>은 주요 변수들이 통일 지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가적 이익, 개인적 이익, 민족 정체성 등의 통일 지지 결정요인들은 통일 지지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 국가적 이익이라는 변수가 통일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합리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이들의 경우 남북한 통일 후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학적 특성이 통일지지에 미친 영향은 많은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통일을 지지하는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남성일수록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6.25를 간접적으로라도 가장 가까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더 높은 통일에 대한 지지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역시 통일지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었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학적 변수들 가운데 교육수준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통일 지지를 봤을 때, 호남 사람일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영남 사람일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15>의 모델 3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이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을 지지하는 정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통일 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켰으나 통일 후 개인적 이익에 대한 불신감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개인적 이익의 증가는 통일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특히 개인적 이익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작용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의 평가가 선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개인의 이익과 같은 요인에 비해 국가적 차원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 이익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표의 모델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통일 지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 정체성 요인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들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를 선호하며, 통일에 있어서 민족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한사회의 민족 정체성 강화가 통일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 평가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 정체성의 회귀계수는 0.33이며 유의도는 0.08을 갖는다. 이와 같은 차이들은 무엇보다도 독립변수들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민족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민족 정체성 강한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반하여 민족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통일 지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통일이 한국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매력으로 느껴져 지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 민족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이익(국가적 이익·개인적 이익), 민족 정체성, 정치적 이념의 차이 등에서 통일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의 통일에 관한 이론들에서 제시되었던 국가단위의 요인에서의 분석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의 통일에 대한 지지요인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통해 나타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 이익의 차원, 민족 정체성, 이념의 차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점차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지지가 결정되는 한국사회의 단면

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도 증가할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성별이 남성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보인 가설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민족정체성보다 개인이익 또는 국가적 이익이 통일지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때 합리적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관계

	국가적 이익	개인적 이익	민족정체성
지역	0.07	-0.01	-0.05
	(0.05)	(0.05)	(0.05)
남성	0.545***	0.502***	0.07
	(0.11)	(0.11)	(0.11)
연령	0.07	0.116**	0.0987*
	(0.05)	(0.05)	(0.06)
수입	0.04	0.101*	-0.06
	(0.05)	(0.06)	(0.06)
교육수준	0.471***	0.354***	-0.02
	(0.11)	(0.11)	(0.11)
cut1	-0.54	0.24	-4.538***
	(0.36)	(0.38)	(0.46)
cut2	1.772***	2.795***	-1.719***
	(0.36)	(0.39)	(0.38)
cut3	3.758***	4.996***	0.953**
	(0.38)	(0.42)	(0.38)
사례수	1,197	1,197	1,197

주요 독립변수와 통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치요소들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첫째, 지역, 성별, 교육수준 변수는 통일 후 '국가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언급된 통제 변수들은 독립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둘째, '개인적 이익'이라는 변수는 지역,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에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중요 독립변수로 설정

한 민족 정체성은 연령이라는 통제변수만이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사이의 유의성을 살펴보면서 독립변수가 어떤 통제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지지라는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의 2010년 통일의식조사를 이용하여 핵심적 가치요소들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와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국가적 이익, 개인적 이익, 국민의 민족 정체성, 나아가 정치적 이념의 차이 라는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통일 후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은 통일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는 반면 통일 후 발생하는 개인적 차원의 이익은 국가적 이익에 비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 셋째, 한국인들은 민족 정체성에 의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적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한국인들도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을 뿐 통일에 대한 지지 의견도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인구학적 변수들은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호남지역은 영남지역에 비해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연령자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만이 거의 모든 모델에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무엇보다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에 대한 태도가 민족 정체성이라는 요인보다 합리적인 요인에 상당

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지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요소들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의 태도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통일에 대한 지지수준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통일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발견은 통일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통일 지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제기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전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지지와 교육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분단의 시간으로 인하여 한국인에게는 민족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다. 국가주도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통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구현우, “합리적 선택이론의 새로운 지평,”『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 no.4 (2009. 2), p.190.

김태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통일연구논총』 no. 4 (1995. 7). pp.130-13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통일의식조사』 (2010).

성승제, “통일 당위성과 통일편익의 법적기반 조성을 위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한양법학』, 43, no.39 (2012. 8), pp.130-132.

앤드류 헤이우드,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 정치학』, 조현수 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485.

엄기홍 외, 『투표행태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2009), pp.111-113.

은종태,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정치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1), p.21 재인용.

은종태,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정치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1), p.21 재인용.

이종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 『통일교육총서』 no. 11 (2005. 1). pp.104-108.

이준구 『행태경제이론』. 2008.

임용수, “진로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교육 문제“(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고려대학교, 1992), pp.89-92

정준표,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 합리성의 개념,”『대한정치학회보』, 11, no.2 (2003), pp.422-424

최수영, “통일의 순이익 확대와 남북경협,”『정보화 정책』, 4, no.4 (1997), p.16.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통일문제 이해 2012,“『통일문제 이해』, no.2 (2012. 3), pp.9-10.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통일문제 이해 2013,“『통일문제 이해』, no.3 (2013. 8), p.11.

Duane Brow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ed.* Monica Kirkpatrick Johnson (John Wiley & Sons, 2002), p.45.

Carey, S. *Undivided loyalties: is national identity an obstacle to European*

integration, vol.3 (Oxford: European Union Politics, 2002), pp.387-413.

Hopkins, N. and S. Reicher, *The Construction of Social Categories ad Processes of Social Change: Arguing about National Identities*, ed. G. Greakwell (Oxford: Butterworth-Heinemann, 1996). pp.53-63.

<부록>

<지역에 따른 통일에 대한 지지>

조사지역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반반	약간필요	매우 필요 하다
서울	3.0	15.9	15.5	37.0	28.7
부산	4.3	25.8	18.3	38.7	12.9
대구	4.7	17.2	34.4	29.7	14.1
인천	4.7	18.8	12.5	28.1	35.9
광주	0.0	2.8	33.3	38.9	25.0
대전	2.7	16.2	35.1	24.3	21.6
울산	0.0	25.0	17.9	39.3	17.9
경기	3.1	12.6	22.2	29.5	32.6
강원	8.3	36.1	8.3	25.0	22.2
충북	8.3	8.3	22.2	27.8	33.3
충남	4.4	17.8	15.6	37.8	24.4
전북	2.4	11.9	28.6	11.9	45.2
전남	2.4	4.9	14.6	22.0	56.1
경북	6.3	25.0	17.2	35.9	15.6
경남	8.0	20.0	22.7	30.7	18.7
제주	7.7	7.7	38.5	23.1	23.1